

“정부가 내팽개친 노동존중, 노동자가 바로 잡는다”

금속노조 ‘소탕단’ 투쟁 마무리 ... “문제인 정부, 불법파견 범죄 엄중 단속·처벌해야”

“불법파견, 당. 비정규직 차별, 당. 노조 파괴, 당!”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차별, 노조파괴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순회투쟁에 나선 금속노조 소탕단이 여드레 동안의 숨 가쁜 여정을 마쳤다.

‘불법파견·모든 차별·노조파괴 소탕 금속노조 소탕단(아래 소탕단)’은 4월 22일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그룹 본사와 일본대사관을 거쳐 청와대 앞에서 모든 순회 투쟁을 마무리했다.

노조 소탕단은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순회 투쟁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했다. 현대건설기계 사측에 서진이엔지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출근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는 2020년 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사내하청지회와 단체교섭을 하던 중 갑자기 폐업을 통보했다.



서진이엔지 노동자 전원이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는 같은 해 8월부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지회는 노조파괴를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규정한다.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현대건설기계 원청이 기획했다고 지

적한다.

노동부는 현대건설기계가 불법파견으로 서진이엔지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다며 해고자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이행을 거부하는 현대건설기계 사측에 지난 2월 과태료 4억 6천만 원을 매겨 내라고 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인 정부가 현대중공업그룹 불법파견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불법파견 범죄자들인 현대중공업그룹 정몽준, 정기선 3대 세습을 지원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시정명령에서 멈추지

말고 직접 나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서진이엔지 해고자인 이병락 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 대의원은 현대중공업그룹과 현대건설기계 원청에 노동부 시정명령을 당장 이행하라고 외쳤다.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교섭을 열자고 원

청 사측에 요구했다.

이병락 대의원은 “지금 공장 밖에 있지만,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처음 사용자와 마주 앉아 단체교섭을 했다”라며 “금속노조와 함께 반드시 정규직화를 쟁취하겠다”라고 결의했다.

박정민 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현대중공업의 불법파견 수법들이 내가 일하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경찰 폭행으로 조합원 부상

노조 소탕단은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소탕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자본인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노조 파괴와 한국산연의 위장폐업·먹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경북 구미 에이씨씨화인테크노한국(옛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공장에서 일했다. 2015년 노조 결성 직후, 사측은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불법파견 노동자로 쓰이다 버려진 것도 억울한데, 사측은 지회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검찰의 파견법 위반 기소, 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잇따르자 지난 2월 사측은 마지못해 지회에 정규직 신입 채용과 위로금 지급안을 제시했다. 지회는 사측이 복직 대상에서

차현호 지회를 제외해 거부했다.

일본대사관 찾은 김형광 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사무장은 “일본 자본 한국산연과 아사히글라스 모두 한국에 들어와 혜택만 누렸다”라며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노동자 생존권을 빼앗고 불법을 저질러 부당한 이윤을 챙겨 일본으로 빼돌렸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산연은 지난 1월 20일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모기업 일본 산켄전기는 지난해 7월 회사 홈페이지에 한국산연 해산과 폐업을 일방으로 알렸다.

노조 소탕단과 아사히비정규직·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은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와 주한 일본대사관이 일본 자본의 불법행위를 해결하고 피해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소탕단은 일본대사관에 노조의 요구사항과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 폭력에 막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소탕단 순회 투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에 소탕단 투쟁의 의미와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범죄 현황을 전하고 ▲상시업무 정규직 사용원칙 입법화 ▲사용자 범위 확대·노조법 2조 개정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대법원이 2010년 불법



파견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불법파견을 뿌리 뽑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한발도 내딛지 못했다”라며 “이제라도 불법파견 범죄 엄중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주는커녕 자본 존중, 친자본 행정을 일삼는 문재인 정부 탓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소탕단 순회 투쟁은 오늘로 끝나지만,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철폐와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팽개친 노동 존중과 불법파견을 투쟁으로 바로 잡겠다”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을 연결해 코로나 19 시기 느슨해진 연대를 돈독히 하고,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소탕단을 꾸려 4월 12일 순회투쟁을 시작했다. 노조 소탕단은 세종시 노동부에서 출발해 현대제철 당진, 현대위아 평택, 기아차 화성, 한국지엠 부평공장 등을 거쳐 20일, 21일 서울을 휘젓고, 22일 청와대 앞에서 해단식을 열었다.

대우조선 파워공 임금인상 투쟁 타결

23일 동안 열띤 투쟁, 최초 집단 합의서 쟁취 ... 설·추석·여름휴가비 신설, 블랙리스트 없음 확인

대우조선 파워공 노동자들이 4월 22일 업체들과 퇴직적치금·단기계약 폐지 등에 합의했다. 아홉 개 사내하청업체와 각 업체 노동자 대표가 합의했지만, 금속노조의 힘으로 조선소 하청 파워공의 목소리를 조직했고 합의를 이끈 첫 사례다.

▲파워공들은 합의에 따라 일당 17만 원에 계약기간 1년(2021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 잔업수당 시간당 2만 원의 노동계약서를 새로 체결한다. ▲설·추석 휴가비 각 15만 원 ▲여름 휴가비 10만 원을 신설했다. ▲4월 30일 까지 적치한 퇴직적치금은 근속 1년이 안 돼도 퇴사 시 받기로 했다. ▲도장 업체 대표들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작성하지 않음을 약속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번 합의는 하청노

동자의 핵심 요구인 일당 2만 원 인상을 쟁취하지 못한 한계와 금속노조가 교섭과 합의의 주체가 되지 못한 미흡함이 있었다” 라고 밝혔다.

지회는 “조선 하청노동자 250여 명이 최초로 금속노조에 집단가입하고, 교섭을 통해 집단 합의서를 작성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라고 평가했다.

지회는 “하청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한 만큼, 노동 관계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과 투쟁, 합의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라면서, “파워공들과 함께 도장업체에서 일하는 스프레이 노동자와 터치업 노동자의 퇴직적치금 폐지와 단기계약 폐지가 시급한 과제다” 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거제, 울산, 목포 등 세 지역의 조선하청지회가 전국 2,500여 명 파워공의 노동조합 가입운동에 나설

것” 이라 결의했다.

대우조선 파워공들은 지난 3월 31일부터 사내 서문식당 앞에서 작업거부에 돌입했다. 지회는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요구안을 만들었다. 지회는 ▲일당 2만 원 인상(17만 원→19만 원)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계약 폐지 ▲법정연차휴가 보장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 등 여섯 가지 요구안을 사용자들에게 전했다.

금속노조는 4월 14일 거제시청에서 ‘대우조선 파워공 투쟁 금속노조가 끝까지 함께한다 기자회견’ 을 열어 투쟁을 지지·엄호했으며, 노조 경남지부는 파워공 노숙농성에 함께 결합하고, 대우조선지회와 조율에 나서는 등 합의를 끌어내는데 역할을 했다.

“위기 핑계 구조조정 저지·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쟁취”

대전충북지부 2대 요구 투쟁 선언 ... “노조파괴 무기 창구 단일화 민주당이 폐기하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를 요구하며 2021년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지부는 4월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을 열었다. 지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일방 구조조정 금지를 요구했다. 지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도 요구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기자회견 여는 발언을 통해 민주당 앞에서 투쟁을 선포하는 의미를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패한 이유는 공정 사회 건설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코로나로 살기 힘든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대전충북지부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1년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라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노동자 생존권 보장 요구를 외면하면 충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서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김용주 대한이연지회장은 “이미 크고 작은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다. 희망퇴직, 임금동결,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이 닥치고 있다” 라면서 “자본

의 일방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지부와 지회가 하나가 돼 투쟁하겠다” 라며 결의를 밝혔다.

조남덕 콘티넨탈지회장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날치기한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때문에 복수노조 사업장의 금속노조가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라며 “노조 설립하고 8년 동안 교섭 한 번 못한 사업장이 있고, 조합비 대납하며 어용노조를 키우는 회사도 있다” 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조남덕 지회장은 “복수노조는 선한 취지의 제도였지만, 자본은 창구단일화를 악용해 노조파괴 도구로 쓰고 있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하라” 라고 촉구했다.